

공 개



| | | |
|--------------|-------------------------|------------------|
| 의안번호 | 제 159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2. 6. 9. (제 11 차) | |

(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 | |
|--------|-------------|
| 제 출 자 | 위원장 고 승 범 |
| 제출 연월일 | 2022. 6. 9. |

1. 의결주문

(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의 前 이사장 ○○○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으로 통보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2022.3.10.) 심의필
- 제10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2.5.19.) 심의필

<별지>

(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 前 이사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원에 대한 조치 : 前 이사장 ○○○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직무정지 6월 상당)으로 통보

○ 조치사유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 3건 위반행위

○ 법적 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개정 前) 제33조, 제45조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제84조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제45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제20조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 제24조의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6조, 제52조

2. 조치사유(지적사항)

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 前 이사장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의 감사선거 (20xx.xx.xx.) 출마예정자인 □□□으로부터 조합원 XXX명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단을 받고 본점 직원에게 동 조합원의 출자금 내역을 조회·기재하도록 한 후,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 □□□에게 제공하였음

나.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개정 前)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 前 이사장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점 직원을 통해 조합원 XX명의 성명, 출자금 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 동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인 본인의 선거운동에 이용하였음

다. 회계업무 부당처리

(1)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관련 회계업무 부당처리

-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추정금액 등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은

20xx.x.x.~ 20xx.x.xx. 기간 중 △△△△△은행 등이 (주)◇◇◇◇ 등 X개사에
취급한 대출(X건, 총 x,xxx억원)과 관련하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X건,
xxx억원)하여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으나,

* 건물 준공 후 미분양으로 차주가 대출금 미상환 시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는 계약

20xx년 및 20xx년 재무제표 주석에 각각 xx억원 및 xx억원의 우발부채를
기재하지 않았음

(2)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및 제83조의3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유지 하여야 하는데도

(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은

20xx년 회계년도 결산시 ●●●(주) 등 XX개 차주에 대한 대출 총 xxx억
xx백만원(XX건)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xx억 xx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x.xx%p 과대계상(부당 x.xx% → 정당
x.xx%)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처리 하였음

관계 법규

1. 금융실명법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제5조의2(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해임
-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다. 문책경고
- 라. 주의적 경고
-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면직
-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4.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6. 삭제
7.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8. 동의서의 유효기간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사용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제출한 인감 또는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의 날인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4.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5. 제3조 각 호에 따른 실지명의를 확인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사항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7.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

2. 신용정보법 관련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2.4. 개정 前)」(2020.2.4. 법률 제16957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대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감독·검사 등)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3.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회계 및 결산)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에서 정한다.

② 조합의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 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가. 자산등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나.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
 - 다. 퇴직금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비율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가. 자산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 나.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단계 및 그 기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가. 재무 및 손익상황의 표시기준
 - 나. 충당금·적립금의 적립기준
 - 다. 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방법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표준규정 등) ①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한 예탁금·적금 또는 대출등의 업무방법(이하 이조에서 "여수신업무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이를 정한다.

② 여수신업무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금·적금 및 대출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예탁금·적금 및 대출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예탁금·적금 및 대출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수신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③ 중앙회장이 여수신업무방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여수신업무방법의 내용을 심사하고 조합 이용자보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여수신업무방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장에 대하여 당해 여수신업무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별표1-1>에 따라 매분기 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다음 각목의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금"이라 한다)과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이하 "여신성가지급금"이라 한다)
 - 가. 상호금융대출
 - 나. 정책자금대출
 - 다. 공제대출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4. 신용카드 채권
5. 미수금
6. 환매조건부채권매수

②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분류를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대출"이라 함은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금 및 여신성가지급금을 말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거래실적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단위의 총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급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 ⑥ <별표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또는 자체적으로 채권 재조정된 가계여신 또는 개인사업자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 ⑦ 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조합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이하 분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 **요주의** :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3. **고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4.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5. **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 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제12조(건전성 비율) ①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건전성 비율은 직전 분기 중 분기말월 기준 대출금 2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2이상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이하 생략)
-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동일채무자에 대한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 나. 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
 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 각호 또는 제12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항에서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연도 중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말부터 제2항 단서를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5 이상(신용협동조합은 100분의 3 이상)
2. 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예대율 : 100분의 60 이상
3. 총대출대비 조합원에 대한 대출비율이 100분의 80 이상(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은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총대출대비 신용대출(햇살론 포함)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수산업협동조합은 100분의 7 이상)

<별표 1-3> 대손충당금비율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 = 당해 회계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채권의 1%이상, 요주의 분류채권의 10%이상, 고정 분류채권의 20%이상,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5%이상, 추정 손실 분류채권의 100%를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의2(회계기준등) ① 조합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한다.
② 이 규정 및 제1항의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목적

1. 이 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동법 제95조에 의거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기관(이하 '상호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신용사업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에 의거 상호금융기관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3.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42.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업계의 관행적 방법이 이 기준에서 정하는 거래처의 분류방법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방법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건전성 비율 산정방법에 따른 '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 이상을 적립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업계의 관행적 방법으로 본다.

주식공시

45. 다음 사항을 주식으로 기재하며, 기타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가) 우발부채의 유형별 추정금액과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및 중요한 약정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14.20.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음의 내용을 주식에 기재한다.

- (1)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 (2)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 (3)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

4. 검사 및 제재규정 관련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거 재직 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금융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제18조제1항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③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주의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④ 임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 4. 사고금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 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 2>

제재양정기준

| 위법·부당의 정도 유 형 |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
|---|------------------------------------|---------------------------|---------------------------|
|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 해임권고(면직) | 해임권고(면직)~ 문책경고(감봉) | 주의적경고(견책) |
|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 " |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 |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
|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키는 행위 | " | 해임권고(면직)~ 문책경고(감봉) | 주의적경고(견책) |
|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 " | " | " |
| 직무태만 | " | 직무정지(정직) ~ 문책경고(감봉) | " |
| 기타 위법 | " | " | " |

<별표3>

금융업종별 ·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공통부문

I -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 책임정도* | | 행위자 | 보조자 | 감독자 |
|-------|---------|-------|-------|-------|
| 유형① | 5천만원 이하 | 견책 | 주의 이하 | 주의 이하 |
| | 3억원 이하 | 감봉 이상 | 감봉 이하 | 감봉 이하 |
| | 3억원 초과 | 정직 이상 | | |
| 유형② | | 주의 이하 | - |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② 법 제4조 위반행위(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 책임정도 | 행위자 | 보조자 | 감독자 |
|------|---------|-------|-------|
| 고의 | 감봉3월 이상 | 견책 이하 | 견책 이하 |
| 과실 | 견책 이하 | 주의 | 주의 |

③ 법 제4조의2(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및 법 제4조의3(금융거래정보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행위

| 책임정도 | 행위자 | 보조자 | 감독자 |
|------|---------|-------|-----|
| 고의 | 견책~감봉1월 | 견책 이하 | 주의 |
| 과실 | 주의 | 주의 | 주의 |

3.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 가. 영업점 감사통할책임자에 대하여는 금융질서문란, 사회적물의를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나. 부·점장에 대하여는 감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다. 임원과 감사에 대하여는 재임기간중 관할 부·점장이 행위자로서 위반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4. 기관에 대한 조치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당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가중 및 감경

-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다. <삭 제, 2016.2.29.>
- 라. 단위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I-2. 회계 부당처리(상호저축은행은 제외)

1. 제재대상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회계처리기준 및 개별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회계관련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제재기준

- 회계 부당처리의 발생동기 및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

| 분 식 규 모 (규모비율) | | | |
|--------------------|---------------------|----------------------|---------------------|
| I (기준비율의 8배 이상) | II (4배 이상 8배 미만) | III (2배 이상 4배 미만) | IV (1배 이상 2배 미만) |
| 해임권고 | 업무집행정지 | 문책경고 | 주의적경고 |

주 1) 규모비율 산정 등 제반사항은「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의 ‘심사·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을 준용

2) 신용협동조합법 적용대상 조합에 대해서는 동 조치양정기준 <표 1>의 규모산출표상 2.규모 조정계수의 주식내용 적용을 배제하고, 규모금액이 700억원~300억원인 경우의 규모 조정계수는 “0.8”,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0.6” 으로 한다.

- 회계 부당처리는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 기인한 사항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주된 책임자로 제재한다. 다만, 담당 임직원에 주된 책임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재할 수 있다.
- 상근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감독책임(주된책임자보다 감경)을 부과한다.
 - 다만, 감사(위원)가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는 등 감사로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위법행위를 사실상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재할 수 있다.
- 회계 부당처리의 발생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되거나 규모가 큰 경우(관련임원 문책경고 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병과 한다.

3. 가중 및 감경

- 위법행위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기준

- 위법행위를 통하여 BIS 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이 크게 왜곡되어 우리원의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 위법행위가 관련법규의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기타 불법자금 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위법행위가 2회계년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 감경기준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비상장 금융회사이거나 회계 부당처리 규모가 미미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세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처리한 경우(차액의 50% 이상을 위반금액에서 감액)
-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의하여 계산된 것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외)

- 우리원에 위법행위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법행위 사실을 공개한 경우
- 검사착수일 현재 과거의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차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시정한 경우
- 기타 대내외의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법행위가 단순과실로 발생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 -5.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행위

1. 제재대상

(1) 개인신용정보 등 부당이용

-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2조제3항]
- 이용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신용정보법」 제50조제2항제3호)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4조제10호]
- 채권추심자가 신용정보 등을 채권추심의 목적외로 이용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추심법”이라 한다) 제10조]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업무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2) 개인신용정보 등 부당제공·유출

-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항, 제42조제4항)
-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이익을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누설된 정보를 다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 제3항)
-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하여 제3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실제 조회·이용하게 된 경우(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여전법 제24조제10호)

- 채권추심자가 신용정보 등을 누설하는 행위(공정추심법 제10조)
- 권한을 넘어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전자금융거래업무 수행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제1호, 제26조)

(3) 개인신용정보 등 보호대책 소홀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유출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밖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신용정보법 제19조제1항)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제3자에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실제 조회·이용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2. 제재기준

(1)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제재대상(1),(2)]

| 제재양정 | 부당이용 | 업무목적외 유출 ¹⁾ | 업무목적 유출 ²⁾ |
|-------------|---------|------------------------|-----------------------|
| 업무정지(정직) 이상 | 500건 이상 | 50건 이상 | 50,000건 이상 |
| 문책경고(감봉) | 50건 이상 | 5건 이상 | 5,000건 이상 |
| 주의적경고(견책) | 5건 이상 | 1건 이상 | 50건 이상 |
| 주의 | 1건 이상 | - | 1건 이상 |

(위반건수) 부당이용 : 정보주체수×부당이용일수/ 유출:정보주체수×유출횟수

주 1) ‘업무목적외 유출’이란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말함

2) ‘업무목적 유출’이란 개인신용정보의 위탁업체 제공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말함

(2) 개인신용정보 등 보호대책 수립·운영 등 소홀[제재대상(3)]

- 위반유형(부당이용, 유출), 위반경로(내부직원, 외부침입), 위반건수 및 개인신용정보 등의 보호대책의 소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관 및 임직원을 제재한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이 CEO 등 임원에게 정보보호관련 조치필요사항을 보고 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임원에게 주된 책임을 부과한다.

| 결과* | 원인 | 5정보보호 소홀정도가 중대 | | 정보보호 소홀정도가 경미 | |
|-----|----|----------------|-----------------|---------------|---------------|
| | | 기관 | 임직원 | 기관 | 임직원 |
| 중 대 | | 업무정지 | 직무정지 (정직) 이상 | 기관경고 | 문책경고 (감봉) |
| 보 통 | | 기관경고 | 문책경고 (감봉) | 기관주의 | 주의적경고 (견책) |
| 경 미 | | 기관주의 | 주의적경고 (견책) | - | - |

* 위반경로·유형별 위반건수, 신용정보 등의 유형(신용정보, 식별정보), 사회적 물의 야기, 고객피해 정도 등

3. 외주업체의 개인신용정보 등 부당이용 및 유출

-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 등의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수탁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수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위탁 금융기관의 소속 직원의 행위로 간주하여 위탁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감독책임 및 정보보호대책 소홀책임을 부과한다. 다만, 위탁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4. 가중 및 감경

-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이용 또는 유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경영방침 또는 영업정책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다수 점포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유출의 경우 대가를 받고 개인신용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개인신용정보 등이 부당하게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내부감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부당이용하였거나 가족, 친인척의 정보를 단순 조회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보호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기타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체 적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V-10. 상호금융조합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신설 2014.7.23.>

가. 제재대상

-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하여 순자본비율이 과대 계상되거나 이로 인하여 적기시정조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를 위반하여 후순위차입금의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해 부당하게 후순위차입금을 조성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과대계상하는 행위(신용협동조합에만 해당)(「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나.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 | 과대계상으로 인한 순자본비율 변동 |
|----------|---|
| 개선/면직 | 5%p 이상 변동을 초래한 경우로서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보다 중한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직무정지/정직 | 3%p 이상 |
| 문책경고/감봉 | 1.5%p 이상 3%p 미만 |
| 주의적경고/견책 | 0.5%p 초과 1.5%p 미만 |

- 주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및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등으로 인한 순자본비율 변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위반금액을 합산한 비율로 제재한다.
- 2) 회계년도말(결산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경우 회계부당처리에 의한 제재기준과 본 기준에 의한 제재기준중 중한 조치로 제재한다.
- 3) 제재양정수준이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의 등 조치

다. 가중 및 감경

-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결과가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가중 제재한다.
-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가중 제재할 수 있다.
-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 외감법 관련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V. 위법행위 유형 구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 결정과정 등

1. 위법행위의 구분

가.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A유형”이라 한다.)

나.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 영업·비영업손익간 계정재분류,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B유형”이라 한다)

다. 위법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각 항목과 관련한 주식사항인 경우(이하 “C유형”이라 한다)

1) 특수관계자 거래

2)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다만, 관련 채무잔액의 130% 이내 금액에 한하고,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또는 자신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은 라.에 해당한다)

3)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으로 발생가능한 우발부채

라. 위법행위가 기타 주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사항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D유형”이라 한다)

2. 중요성 기준금액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성 기준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중요성 기준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외부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감사보고서 첨부한 문서에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중요성 금액(원칙적으로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 표준 중요성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는 1) 회계법인이 회사별 규모, 상장여부, 감사위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중요성 금액 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회사별 중요성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담당이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3) 합리적 근거 없이 표준 중요성 기준 방식의 중요성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위법행위의 수정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 적용

1) 감사인의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금액을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으로 본다.

2)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 ① A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1배
- ② B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 ③ C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5배
- ④ D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15배

나. 표준 중요성 기준 적용

1) 회사의 자산 및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2)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 ① A유형 : 규모금액의 1%
- ② B유형 : 규모금액의 4%
- ③ C유형 : 규모금액의 5%
- ④ D유형 : 규모금액의 15%

* 규모금액: “표1”의 규모금액산출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규모배수의 계산 및 적용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위법행위 관련금액의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를 산정한다.

- ① 위법행위의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동기별로 분류한다.
- ②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의 유형 중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 관련금액은 합산하여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유형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 ③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 유형별 규모배수를 합산하여 위법동기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 ④ 위법동기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표2>에 따라 각각의 위법동기별 규모배수를 위법동기별로 환산하여 환산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 ⑤ D유형은 유형별 규모배수를 6배로 제한한다. 동 한도 적용은 위법동기별로 환산하기 전의 위법동기별로 규모배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규모배수 정도에 따른 중요도의 구분

위법행위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 및 환산후 규모배수에 따라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환산후 규모배수에 따른 중요도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에 따른 중요도보다 1단계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중요도 | I | II | III | IV | V |
|------|--------|-----------------|----------------|----------------|----------------|
| 규모배수 | 16배 이상 | 8배 이상 16배 미만 | 4배 이상 8배 미만 | 2배 이상 4배 미만 | 1배 이상 2배 미만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소관부서 | 중소금융과 | 상호금융국 |
| 연 락 처 | 02-2100-2983 | 02-3145-8080 |